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특집] 노인일자리 현장 좌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말하다”

Vol.13

2023 WINTER

고령 사회의 생활과 일

The Life & Work in the Aged Society



CONTENTS

권두언

- 02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할 길**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노인일자리 현장 좌담

- 04 **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말한다'**
사회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토론 김중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실장
(캐나다)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
이진용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진호 청송시니어클럽 관장

이슈

- 14 **건강한 초고령사회의 준비, 자원봉사**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연계방안에 대한 시론**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부연구위원

고령사회와 노인일자리 동향

- 25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요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

통계리뷰

- 29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까?
Data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우리동네 노인일자리

- 37 **'나는 이 출근길이 참 좋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권두언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할 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기준 9500천 명에 이른다.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 추세로, 이미 OECD 주요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에 도달해 있고, 일본,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이 되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5년 30.1%, 2050년 40%로 예측된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며, 우리나라는 불과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간의 공적연금 수급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은 불안정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년 기준 38.9%로 OECD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다. 이처럼 공적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년기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이는 국가 성장 동력의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노인 인적자본 활용의 필요성은 노동력 공급 및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년기 4품(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종합적인 대처로써 2004년 도입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예방적 노인복지를 실현해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안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보충적 소득보전을 가능케 하며, 또한 보람 있는 사회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관계 개선 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2004년 도입 당시 2만 5천 개의 노인일 자리를 목표로 하였던 노인일자리사업은 높은 정책수요에 대응해 2023년에는 88.3만 일자리 창출로 성장하였고, 2024년에는 103만 일자리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세대의 욕구를 반영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일 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23년, 8.5만 개 대비 6.6만 개 늘어난 15.1만 개를,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23년 19만 개 대비 3.5만 개를 늘려 22.5만 개를 목표로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고, 기대여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더욱 길어짐에 따라 노인집단 내 다양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수요를 단순히 연령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현 노년층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능숙한 디지털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노후준비는 불충분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에의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현 노년층은 고용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이 대다수이므로, 민간 영역의 취·창업도 필요하나 복지적 차원에서 사회활동도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 수요추계를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기 노후소득 보장 및 자아실현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내실화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유형 다양화 및 민간분야 취·창업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거버넌스 기반의 노인일자리 수행체계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법적 근거 강화, 근거기반 정책 수립의 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 노인일자리 정책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말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간 노년기 4고(苦)인 경제적 어려움, 건강, 소외와 역할상실 문제 해소에 기여해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정책 개발 및 연구, 데이터 구축, 종사자 교육,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적기반을 토대로 보다 더 양질의 노인일job 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2025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년을 앞두고, 지난 20여 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개발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 사회**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고령사회의 삶과 일 편집위원장)
- 토론(가나다 순)**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실장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
이진용 대한노인회진안군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진호 청송시니어클럽 관장
-

座談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고령사회의 삶과 일 편집위원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실장

사회 2005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관 설립 이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개원 2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개발원은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 발전을 위해 힘써왔는데,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 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정책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다고 보는가?

김창규 현재 약 100만 명의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장 종사자로서 평가했을 때, 개발원이 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고령층에게 주체적, 생산적 역할을 부여하고,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했음이 자명하다.

반면, 노인일자리사업의 명칭, 분류 등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여, 현장 종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업의 명확한 분류체계 확립 및 현장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진용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개발원의 적극적인 확장 및 노력 덕분에 안정된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이러한 체계를 통해 참여자, 현장 종사자 등 인적자원 관리 역시 더욱 쉬워졌다.

하지만 앞서 김창규 관장이 말한 바와 같이, 공공형,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유형 변화와 양적 확대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참여자와 현장 종사자의 혼란이 가중된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

황진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개발원의 대비가 미흡했던 점도 언급하고 싶다. 디지털 관련 역량 및 경험,

평균 교육 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기존 고령층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렇기에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질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참여자 교육자료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 내용과 방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개발원을 주축으로 인식 개선과 관련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혜지 노인일자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승인 통계 지정 등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발원이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일관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과 개발원의 역할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 형성이 부족한 점 등은 향후 개발원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김종민 개발원은 정부의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예시로, 새로운 노인일자리 유형 및 아이템을 개발·보급하고, 수행체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상의 한계 역시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자체, 수행기관 등과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일자리사업량 증가에 비해 수행기관 인프라는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 확충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정책의 내부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개발원은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어 왔는가?

김창규 초기에는 현장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이 개발원 조직에 구성되어 있어, 현장과의 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개발원과 현장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발원이 지역사회 공동체 및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현장과의 엇박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현장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원은 현장과의 소통창구를 만들고 적극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혜지 대한민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만큼, 개발원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에 따라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조직문화 역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개발원 조직문화의 특징은 '수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약 100만여 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개발원과 현장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하를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발원이 외부가 부여하는 정체성과 목표대로 움직여왔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 및 개혁이 부족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능력 위주가 아닌, 수행기관의 역량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본부의 역할을 보다 더 확장하고, 노무, 법률 등 수행기관의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개발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종민 개발원 설립 초기에는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사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일자리 아이템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량의 확대와 신노년세대의 노인인구 유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개발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황진호 개발원 설립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현재의 개발원 지역본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히 아쉽다. 지역본부가 지역 현장에 밀착하여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은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2월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당해년도 1월에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하지만 서버 과부하로 인해 이러한 일정 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

산시스템 고도화는 당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진용 먼저 그동안 현장에 대한 개발원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실제로 취업알선형의 경우, 일정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기에는 해당 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개발원 측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은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인데, 농촌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일자리사업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환경의 인프라나 정책 수요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2020년 초부터 유행한 COVID-19는 약 3년동안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COVID-19를 겪는 동안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이진용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통제가 가장 힘들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은 인구 구성비, 생활수준, 주변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 정책이 시행될 때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COVID-19 시기에 일괄적 통제가 행해지며, 지역사회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 면이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교육 및 사후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황진호 특히 경로당은 지역에서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의 의미를 넘어,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座談

공간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 때를 돌아해보면, COVID-19 유행 당시 대부분의 경로당은 '감염병 전파 방지'를 명목으로 폐쇄 조치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이 틀림없으나, 지역에 어르신은 소통이 단절되고 고립되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및 대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김창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률적인 통제로 인한 사회적 감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본인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버티는 시간을 보냈다.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개발원이 주도적으로 관련 교육 및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면,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최혜지 COVID-19의 유행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과,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까지의 연결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별 주체가 독립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수행기관, 개발원, 참여자 등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



이진용
대한노인회진안군지회
노인취업지원센터장

座談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진호

청송시니어클럽 관장

사회 _____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사회적 위험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개발원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김종민 _____ 새로운 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개발원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또한 작금의 패널조사와 같이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 체계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델에 대한 근거 역시 마련할 수 있기에,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창규 _____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계속해서 변경된 것은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초기의 취지와는 달리, 정량적 평가에 치중된 것은 분명한 한계다. 향후에는 좀 더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 및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개발원,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 일자리는 많지만, 이를 채울 일거리가 부족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소득, 저학력자 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혜지 _____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변화는 크게 정책의 대상자(고령층), 개발원의 노동력, 사회적 가치 세 가지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대상자의 변화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되며, 해당 세대를 만족시킬 새로운 사업모델

이 필요해졌다. 다만, 해당 세대와 기존 고령층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각 세대의 특성 및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원의 내부 조직구성의 경우,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기성세대와 MZ세대는 문화,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에, 조직 구성원의 속성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안 강구 및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강조되는 ESG를 주목해야 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아사업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ESG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책 공급 주체인 개발원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안에서 노인일자리아사업의 정책 성과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회 약 20여 년 동안, 급격히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책의 모든 주체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설립 당시의 초심을 찾아 현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고성장, 고소득, 저물가 시대에서 저성장, 저소득, 고물가의 열악한 여건 속에 놓여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년층에 진입하였다. 지난 20여 년 노인일자리아사업의 1기를 회고하며, 이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노인일자리아사업 2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현장 좌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말하다

주요 내용

하나, 노무, 세무, 법적 소송 등 개별 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전문인력을 연계하여 지원하자.

둘, 현장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를 강화하자.

셋, 급격히 양적으로 팽창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자.

넷,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밀착형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의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하자.

다섯,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연령대와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을 체계화하고 노년기 인적자원 개발을 활성화하자.

여섯,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자.

일곱,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자.

여덟, 베이비붐 세대의 새로운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중·장기 노인일자리 비전을 수립하자.

건강한 초고령사회의 준비, 자원봉사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년에는 평균수명이 84.2세로 연장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6년에는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노인을 돌보는 전통적 가족부양체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고, 노인단독세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노인은 자원봉사서비스의 수혜자가 된다. 이와 반대로 건강한 노인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사회적 참여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바로 여기에 자원봉사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활동적인 노인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 주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노인은 '자원봉사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이자 지역의 인적자원인 노인

노인은 노인 특유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 때문에 그들만의 성격이나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성격이 나타나는 원인은 질병, 빈곤, 고독의 3고(苦)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노년이 되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로 많은 장애가 증가하고, 적응능력의 저하와 함께 자주 그리고 쉽게 욕구불만에 이르며, 이러한 욕구불만으로 인해 성격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대 간 갈등은 깊어가고 경로사상은 실종 위기에 있지만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토대는 너무도 빈약해 노년기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의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독거노인과 노인자살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홀로 살던 노인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는가 하면, 잦은 병치레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독감, 생활고 등으로 급속한 가족해체와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빈곤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 등이 크게 늘면서 노년층 근로자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이며, 고용형태도 매우 열악하다.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탓에 노년층 가구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영역인 책 읽어주기, 외출동행, 상담, 가정예의 초대, 야외나들이, 관광, 문화예술 관람동행 등과 같은 정서적 서비스, 가사 수선 및 장보기 등 심부름과 같은 가사적 서비스, 밑반찬 제공, 후원, 결연, 캠페인, 바자회와 같은 경제적 서비스, 병원동행, 수속, 수령대행 및 병문안, 간호, 한증목욕, 지압이나 안마 등과 같은 의료적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들이 바로 노인이다.

반면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장년처럼 활동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역할이 줄어들어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이러한 노인들은 본인의 과거 경험과 능력을 살리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다양한 종교, 자원봉사, 동호회, 스포츠 등의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명제를 몸으로 실천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로 볼 수 있다. 건강한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써 더욱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노인들의 여가시간 또한 자원봉사활동으로 건전해질 수 있다. 여가시간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얻어진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적인 능력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전문기술, 교육, 외국어,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젊은 시절 여유가 없어 시도하지 못한 부분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갈 수도 있다. 즉, 끊임 없는 자기계발의 장으로서의 자원봉사영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드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와 자원봉사의 '역의 상관관계'

그런데, 고령화 사회의 필수요건인 사회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이 활발해지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며, 서비스 내용이 다양화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일자리 영역으로 참여하게 되어 자원봉사자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영역의 봉사프로그램이 사회서비스로 충족되다보면 봉사활동 일감도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사회서비스는 생활보조바우처, 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증가는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주된 영역이었던 사회복지 분야, 의료 분야, 교육 분야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영역으로의 변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전통적 자원봉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 일자리와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과거 자원봉사활동 대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무보수활동이 유급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변환되면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서는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자원봉사 대상자와 영역, 서비스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노인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취업을 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 사회서



비스에 참여하던 자원봉사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자원봉사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시행되었던 기점인 2008년부터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대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봉사실적의 대입 미기재 등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8.4%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학생들에 이어 노인연령대 참여자들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었지만, 이 또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대민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봉사활동

1) 공유주거(주거공동체)와 사회적 가족

초고령화와 더불어 1인가구의 증가같은 가족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혈연중심의 가족관계가 아닌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유동적인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가족 형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가족중심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가족관계의 유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이 새로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감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관계 복원의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족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대신하는 혈연적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성원들에 의한 사회적 탄력망(trampoline)의 기능이 자원봉사활동으로 가능할 수 있다.

노인 1인가구들의 사회적 가족을 형성, 연계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공유주거(Co-housing) 등 새로운 주거공동체사업에 봉사활동을 접목시키고 있다. 스웨덴 스

독홀름시 ‘페르드크네펜’ 프로그램, 영국의 노인보호주택이나 공동주택공급정책, 독일의 ‘다세대공동주거(Mehrgenerationshäuser)’, 노후모텔이나 미분양주택을 1인가구용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미국의 ‘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 노노케어와 원플러스원 기부활동

노인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민간자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자살 이유가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이기에,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상담전화 자원봉사, 말벗봉사 및 차량이동봉사 등의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만 해도 자살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노인클럽처럼 독거노인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노노케어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감도 해결하고 건강함도 유지하는, 공간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노인의 마음을 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서로 돕는 봉사활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직계 혈족의 부양에 상관없이 자녀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홀몸노인들에 대한 반찬서비스나 생활용품 지원(원플러스원으로 끼워주는 물품을 기증하는 운동)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자원봉사 서비스도 필요하다. 기업과 종교단체, 직능단체 및 동호회클럽 등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결연사업이 더욱 요구된다.

3) 4차 산업혁명과 노인자원봉사활동

또한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에 의한 사회변화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회 제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는 것처럼 노인자원봉사 영역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기술

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더 많이 축소시키고, 첨단기 계화 속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공동체문화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간 혹은 노인과 지역사회주민들 간의 접촉을 늘리고 갈등을 축소하는 프로그램,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용시스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 자원봉사신청 및 교육, 배치, 활동 실적 확인, 기타 다양한 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적 의미의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 기능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구현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본인에 대한 빅데이터들은 노인 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일감으로 안내할 것이며, 노인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유행의 전염병에 따른 방역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노인자원봉사서비스도 뉴노멀로 사회에 자리잡게 되자 사회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디지털 사회혁신을 수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로 변화되었다. 대면에서 비대면, 집합적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로 전환이 변화의 예에 해당한다. 비대면 디지털 기기 확산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집단별 갈등, 혐오와 차별 등 다양한 위험이 확대되고 일상화되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디지털화와 지식정보에서 소외되고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적 개입도 필요하게 되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시스템 강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

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 감사의 분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저 시간이 남아서 하는 활동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와 경험, 기술과 능력을 무보수로 내놓아 이웃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건전문화를 실천하는 한국노인의 생활모델(봉사활동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느끼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며,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을 위한 방법인 마일리지제도에 따라 국가적 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비 및 급식비, 재료비 등 활동실비 지급, 선진지 견학, 지역신문이나 회보 등에 홍보, 지역 TV나 라디오에 소개, 사례발표회 개최, 기관행사 초대, 감사카드와 생일 카드 송부, 자원봉사축제 개최, 상해보험 대상범위 확대, 문화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무료 수강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포상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양적·질적 프로그램 개선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및 질적 향상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노인자원봉사자의 질적 향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모집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순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아니라 노인들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능력들을 의미 있게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



미를 담은 홍보문구를 통해 자발적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신청 후에 초기 탈락자가 많아 이들의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청소년, 노인자원봉사자 혹은 노인수혜자를 대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초교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슈퍼비전 등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 교육이 요구된다. 교육받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 제공과 자원봉사수혜처, 그리고 연결자 간의 만남의 장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 개발이 자원봉사자 확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원봉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처의 정보와 개발이 자원봉사자 발굴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를 넘어 교육, 문화예술, 전문기술, 보건의료, 공공행정과 같은 분야에서 노인자원봉사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 기관 및 시설, 지역사회 등 자원봉사활동 영역별로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는 기획부터 당사자인 노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은 상당 부분 단순노력봉사에 치우쳐 있었다. 근로봉사는 단순업무나 보조적인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원봉사관리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의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실제로 노인봉사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능별, 대상별, 계층별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

원봉사활동은 기획, 수행, 평가까지 노인자원봉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기본이다.

3)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존경하는 문화 조성

어떤 정책이나 시책보다도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및 우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만 지출하는 대상이라는 인식만 남게 된다. 노인자원봉사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자야말로 정부의 정책적 근간이 되고 있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대전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철학의 근저에는 노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역할론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노인에 대한 존경심 없이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노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성취감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부심,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혜영(2008), 자원봉사실천론, 도서출판 신정
- 구혜영(2018), 자원봉사전 2판, 도서출판 신정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 연계방안에 대한 시론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여전히 낮은 노인자원봉사 참여율

통계청 사회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1년 19.8%에서 2021년 8.4%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23년에는 10.6%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 대비 2021년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주요 요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통적 대면 방식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었으며, 특히 봉사활동의 대학입시 미반영에 따라 10대의 봉사활동 참여율이 2019년 76.1%에서 2021년 23.3%로 대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는 지난 10여 년 간 코로나19 시기와 무관하게 전 세대 중 가장 낮다. 과거 우리나라 노인들은 주로 자원봉사의 대상으로서 여겨졌으며,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인식되지 않았다(김형수 외, 2023). 2011년 노인자원봉사 참여율은 5.5%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까지 10년 내내 6%대를 넘지 못했다. 그나마 2023년에는 7.4%의 참여율을 나타내, 지난 1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인자원봉사자 참여율이 낮은 것은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저조 및 기관 인프라의 부족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건강 및 경제수준이 여유롭지 못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모선희, 2023).

자원봉사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며, 대개 활동 장소, 활동 대상,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내용(역할)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2023년 가장 큰 비중을 보인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생활편의 지원'(32.5%)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19.5%, '문화행사' 14.5%, '주거환경' 13.4% 등의 순이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의 경우 환경보호(43.2%), 20대는 '교육'(20.4%),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은 모두 '생활편의 지원' 영역이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는 '생활편의 지원'(38.6%), '주거환경'(20.7%), '상담'(12.9%), 등이 주된 활동분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다양한 활동분

〈표 1〉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2011~2023년)

(단위: %)

연령대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전체	19.8	19.9	18.2	17.8	16.1	8.4	10.6
13~19세	77.7	80.1	76.6	78.4	76.1	23.3	27.2
20~29세	13.2	13.7	11.6	11.5	9.9	6.4	8.9
30~39세	11.2	11.2	10.6	10.7	9.8	4.8	6.1
40~49세	17.0	17.3	15.6	17.0	15.4	8.9	11.1
50~59세	14.6	14.5	14.6	14.2	12.6	9.4	12.0
60세 이상	7.2	7.8	7.8	7.8	8.1	6.4	8.6
65세 이상	5.5	6.2	6.6	6.3	6.5	5.2	7.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재구성.

〈표 2〉 2023년 연령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야

(복수응답, 단위: %)

연령대	생활편의 지원	주거 환경	교육	상담	보건 의료	농어촌 봉사	문화 행사	환경 보호	행정 보조	안전· 방범	인권· 공익	재해·재난 응급	국제협력· 해외봉사
전체	32.5	13.4	9.3	9.5	7.7	7.4	14.5	19.5	3.5	8.2	1.3	5.2	2.0
13~19세	25.0	6.3	6.4	4.5	5.2	1.4	17.4	43.2	2.6	4.0	0.4	1.1	1.9
20~29세	17.8	6.4	20.4	7.6	17.3	4.8	18.2	12.7	8.0	1.8	1.4	5.6	3.8
30~39세	26.1	14.1	13.3	10.4	8.7	8.3	14.2	18.6	4.9	8.2	2.2	5.9	3.6
40~49세	34.1	11.9	12.9	9.2	7.3	6.6	12.9	15.5	3.3	14.4	1.5	4.9	1.7
50~59세	39.1	16.3	7.4	11.1	7.8	10.9	12.3	15.1	2.5	10.5	1.6	7.6	1.6
60세 이상	40.5	20.7	3.4	12.7	4.7	10.4	13.8	12.5	2.6	7.8	1.3	5.8	1.4
65세 이상	38.6	20.7	2.8	12.9	4.7	10.6	11.5	11.0	2.1	6.2	0.8	4.4	1.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3)」 재구성.

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대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전 세계적 인구고령화와 노인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자원봉사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의 모집, 연계, 활동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 되고,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자원봉사 참여자와 수혜자의 서비스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자원봉사 참여가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MZ 세대 등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봉사활동 개발의 필요성이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회성, 단기 참여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기반 가상의 자원봉사활동, 소셜 미디어를 통한 참여도 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자선, 사회참여, 자기개발 등 더욱 개인을 중심으로 한층 더 다변화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기주도성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자원봉사 활동방식 및 자원봉사 관리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원봉사자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인구학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의 참여방식은 점차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여유시간이 생기면 짧게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마이크로 자원봉사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조직 관리에 있어서 관료적 행정 주의를 탈피하고,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의 유연

한 자원방식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안부확인 자원봉사(check-in-and-chat volunteers),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지역사회 대응 자원봉사(community response volunteers) 등은 시민 주도로 조직된 것이다(Carlsen et al., 2021)

영국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간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해 봉사자들을 유인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투자적 차원으로 접근하며,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접근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영역에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Biddle & Gray 2021).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마이크로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 모색된 바 있으며, 이미 온라인 방식의 자원봉사 운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활동 자체가 가상공간으로 이동하는 전환을 가져왔으며(노법래 외, 2022),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과 더불어 심화된 인구고령화는 자원봉사 정책에 새로운 위기가자 기회의 장을 열고 있다.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노년기 삶이 질여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일과 사회활동을 원하는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노인자원봉사활동을, 그리고 노년기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평생학습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Palmore, 1981)으로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사회참여는

이처럼 직업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여가선용 등 노인의 욕구 달성을 위한 개인 또는 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노년기 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고에서는 노년기 다양한 사회참여 영역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3>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 내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유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한편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위를 강화하는 최근의 자원봉사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노인일자리사업과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될 수 있다. 자원봉사의 광의적 개념에서 보면, (민간형은 제외하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원봉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논의가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입 당시,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 기존의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중첩되어 노인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것(허준수 외, 2005)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자원봉사 현상의 혼란을 넘어 노인자원봉사를 위축 또는 잠식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표 3〉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비교

구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대상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지원	연 20만원	월 27만원	59.4만원 (주휴, 연차수당 별도)
규모	48,000명	608,000명	85,000명
참여기간	3~11월	1~11월	1~10월
활동기준	월 2회 이상 자율 운영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재구성.

다. 노인일자리사업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기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노인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유도하여 급여를 받고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정진경 외, 2009)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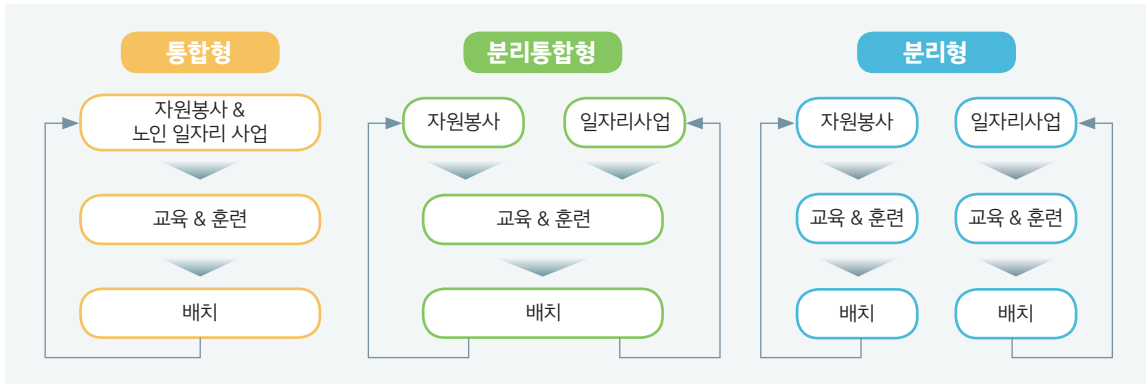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의 노인자원봉사의 위축 내지는 저조한 상황은 노인일자리사업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자원봉사 자체의 속성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원봉사는 1)공익을 추구하고, 2)자발적으로 참여하며, 3)경제적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4)누구나 참여하여 자원봉사자 이상의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른바 과거의 “착한 자원봉사자”가 사라지고 자원봉사의 의미와 영향이 무엇인지를 묻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일만 하려는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있다(이강현, 2009).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전통적 자원봉사의 속성에 대한 도전 받으며, 자원봉사는 스스로 모순적인 요구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원봉사의 고유한 속성에 도전하는

지점을 가지게 되며,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중첩되는 지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자원봉사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기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매개적 의미를 지닌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의 연계는 필연적이다. 허준수 외(2005)는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초기에 자원봉사와의 연계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1)통합형은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대상 노인을 완전히 통합하여 모집, 교육 및 훈련,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2)분리통합형은 각각의 사업대상을 모집해 교육·훈련 및 배치를 일원화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3)분리형은 각각의 별도의 주체가 모집, 교육, 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공공형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 사업단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연계모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 모형



자료: 허준수, 이금룡, 원영희(2005).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기반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주로 소득보장 정책,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바, 고령화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참여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노년기의 주체적 사회참여는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사회적 편견, 차별, 그리고 주변인으로서의 소외된 대상으로 여생을 영위하는 노년기에 있어서, 사회참여 문제는 다른 세대보다 더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적 측면에서 노년기의 사회참여는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타 세대와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스스로 개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UN의 노인에 관한 원칙 내 참여의 원칙에서는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해야 하며, 흥미와 노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해야 하며,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대상에 대한 시혜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배제에서 주체적 사회참여의 존재로,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형수, 모선희, 윤경아, 정윤경, 김동선(2023). 현대 노인복지론(7판). 학지사.
- 노법래, 정진경, 최권호, 이민영(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1): 133-155.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 정진경, 박화옥, 윤지은(2009) 노인자원봉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사)한국자원봉사포럼.
- 정진경, 부경희, 이민영(2015). 온라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자치부.
- 허준수, 이금룡, 원영희(2005).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 송실대학교 노인복지연구센터.
- 행정안전부(202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행정안전부.
- Biddle, N., and Gray, M.(2021). Volunteering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COVID-19 pandemic (April 202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alsenm H. B., Toubol, J., and Brinker, B.(2021). On solidarity and volunteering during the COVID-19 crisis in Denmark: the impact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media groups on the distribution of support, European Societies, 23(1), 122-140.
- Palmore, E. B.(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ck longitudinal stud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요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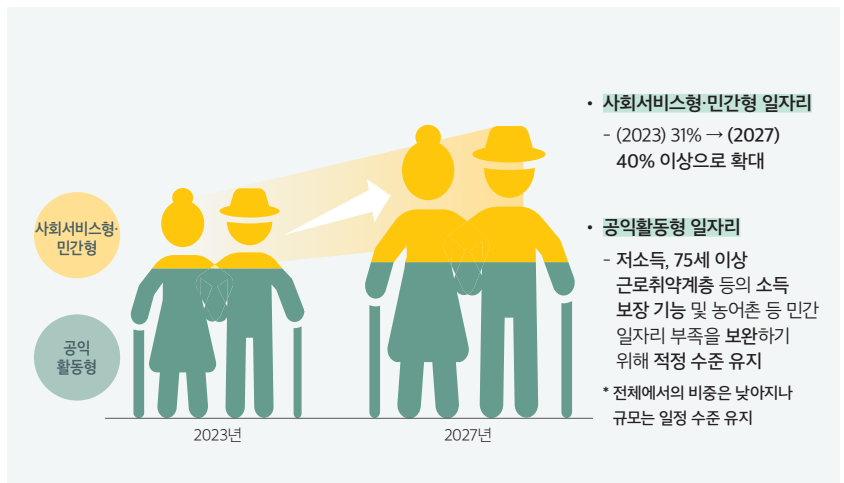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

2024년 사업량 103만개, 역대 최대의 사업량 확대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약자복지 지원'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담았다. 종합계획에서는 천만 노인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올해 88만 3천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을 2027년에는 노인인구의 10%인 약 120만명에서 제공하고, 경험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 방향에 맞춰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대폭 확대된다. 2024년 정부안을 살펴보면, 2023년 88만 3천개인 노인일자리 수는 2024년 103만개 까지 확대되어 전년 대비 14만 7천개가 증가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4,862억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예산이 최초로 2조원을 넘길 예정으로, 금년 대비 31%가 증액된다 (2024년 정부안 2조 262억원).

<그림> 제3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 상 유형별 일자리 확대 안





일자리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은 4만 6천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 6천개, 민간형은 3만 5천개가 늘어난다. 베이비붐 신노년 세대를 대비하는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증가분이 전체 일자리 증가분 14만 7천개의 70%인 10만 1천개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유형별 일자리 수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단가를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원에서 7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담당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수도 2023년 5,300명에서 1,220명을 증원하여 6,520명까지 늘린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시니어클럽과 노인복지관의 일자리 담당자 증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

의 소득 보장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고려한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과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증액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

늘어난 일자리는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 확충에 집중된다. 2024년에 새롭게 추진할 주요 일자리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 분야이다. 경로당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노인복지 이용시설로 전국에 68,000개가 있으며 촘촘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거점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상당수는 7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정부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급식제공 및 치매 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폐지수집 노인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비율(정부안 기준)

(단위 : 천개)

구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합계	883		1,030		+147	(+16.6%)
■ 공공형	608	(68.9%)	654	(63.5%)	+46	(+7.6%)
■ 민간·사회서비스형	275	(31.1%)	376	(36.5%)	+101	(+36.7%)
- 사회서비스형	85	(9.6%)	151	(14.7%)	+66	(+77.6%)
• 사회서비스형	80		141		+61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5		10		+5	
- 민간형	190	(21.5%)	225	(21.8%)	+35	(+18.4%)
• 시장형사업단	45		58		+13	
• 취업알선형	88		95		+7	
• 시니어인턴십	55		70		+15	
• 고령자친화기업	2		2			

- 총량 : ('23) 883천개 → ('24) 1,030천개(+147천개)
 - 공공형 물량은 증가시키되 사업비중 점진적 축소(27년 60%),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중심의 일자리 확대 추진
- 유형별 : 공공형 654천개(+46천개), 민간·사회서비스형 376천개(+101천개)
 - (공공형) 저소득·후기고령층 소득보장 수요에 지속 대응
 - (민간·사회서비스형) 국정과제 추진 및 베이비붐세대 등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비중 확대
- 노인일자리 담당자 : 일자리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6,520명(+1,220명)) 및 처우개선 강화

로 흡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관련 연구를 시행중에 있으며 폐지수집 노인의 규모와 폐지줍는 노인의 재산, 소득, 가구구성, 건강상태,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 특성을 파악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자원재활용사업으로 흡수하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중인 취약계층 급식지원사업 확대에 일자리 참여자를 투입한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 이용대상

자를 보다 넓히고 급식의 조리, 배식, 위생관리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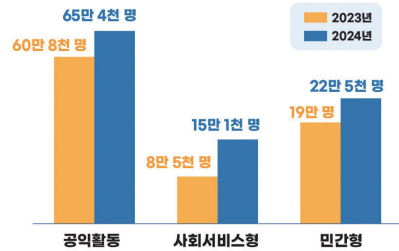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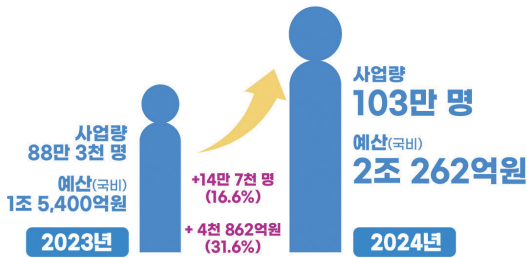
네 번째로,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수업 전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돌봄지원 서비스”, 국토부와 함께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니어 안전점검원” 사업, 경찰청과 함께하는 “경찰서 급식지원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안)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폭 확대,
노인 인구의 10%에게 제공
2018년 이후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 7% 인상*



* 공익활동 : 27→29만원 / 月+2만원
사회서비스형 : 71.3 → 76.1만원(주휴수당 포함) / 月+4.8만원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이 발굴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를 위한 취·창업 일자리 자원 확대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일자리 확대('23년 190천개 → '24년 225천개)에 따라 취·창업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식사 및 세탁 서비스 분야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형사업단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내 1인 노인 가구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노인, 참여기업의 노인일자리 접근성을 향상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취업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민사이트인 “노인

일자리 여기” 기능 개선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참여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성공을 위해 관계자간 협력이 필수

정부는 2024년에 신규 확충하는 14만 7천개의 노인일자리는 약자복지를 지원하고 공익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관계자 및 수행기관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확인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일자리를 통한 약자복지 증진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총량 확대”에 적극 동참하여야 성공적인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까? Data에 기반한 판단의 중요성



손호성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STATISTICS REVIEW

서론

‘택시 운전자가 몇 살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운전을 몇 십 년간 사고 없이 잘하고 다니셨는데 80세가 되신 해에 사고가 여러 번 나서 어머니 차를 팔아버렸어요.’ 노인 운전과 같은 검색어를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문장이다.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동시에 증가하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 또한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노인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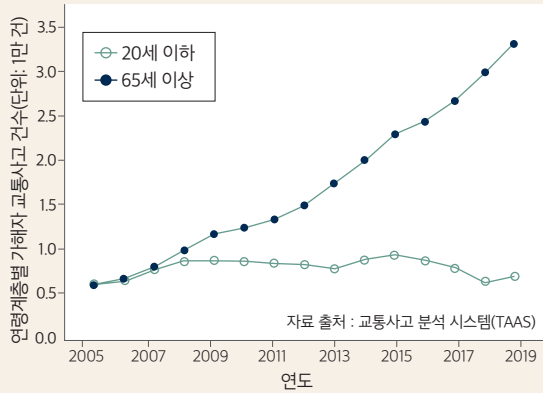
고령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운전 제한 정책이 대두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판단된다. 첫 번째 이유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능력이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나 민첩성 등이 감퇴하므로 고령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교통사고 확률에 미치는 요인은 의학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하다. 가령 운전 경력이 교통사고 확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자일수록 운전 경력이 더 많고 교통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을 좀 더 능숙하게 하고 조심해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령자일수록 교통사고 확률은 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교통사고 관련 통계 자료나 사람들의 일화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여러 언론 기사에서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에서 흔히 인용하는 통계 자료는 <그림 1>과 같은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의 연도별 추세이다. 그림에서 흰색 동그라미는 교통사고 가해자 중 20세 이하 집단이 일으킨 건수를 가리키고 진한 동그라미는 65세 이상 집단이 발생시킨 건수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20세 이하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연 8,000건 정도인데 65세 이상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림 1>과 같은 통계를 토대로 ‘고령 운전자 일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 고령층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적으로 이 연령계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 고령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두 집단 간에 교통사고 건수가 차이나는 원인은 연령 때문일수도 있지만 연령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연령 차이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확률이 높고 이러한 다른 요인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가령, 전자의 집단은 대개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도시에 비해 시골의 교통 인프라가 열악(예: 부족한 가로등 수 등)하기 때문에 전자의 집단에서 사고 건수가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의 집단에서 사고 건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연령’ 때문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 때문인 것이다. 즉,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림 1> 연도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20세 이하 vs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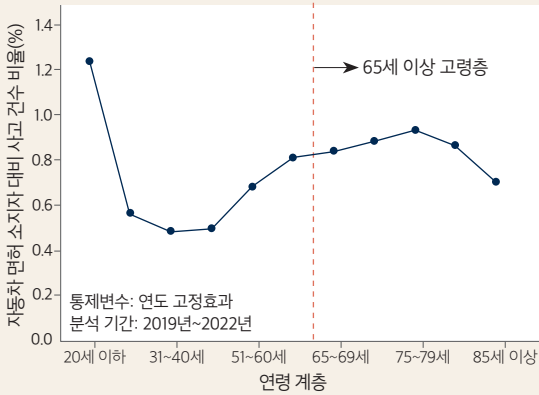
볼 수 없다.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지는지와 관련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령계층별 단순 사고 건수가 아닌 사고 비율을 분석해야 하고, 연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여러 특성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확률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호에서는 여러 통계자료와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쟁점을 최대한 해소한 상태에서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 확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호에서 제시한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이 높은지, 그리고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호에 제시한 결과를 통해 data에 기반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거시(Macro)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크게 거시 자료와 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거시 자료로 활용한 것은 경찰청에서 매년 공개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자료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분석시

〈그림 2〉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사고 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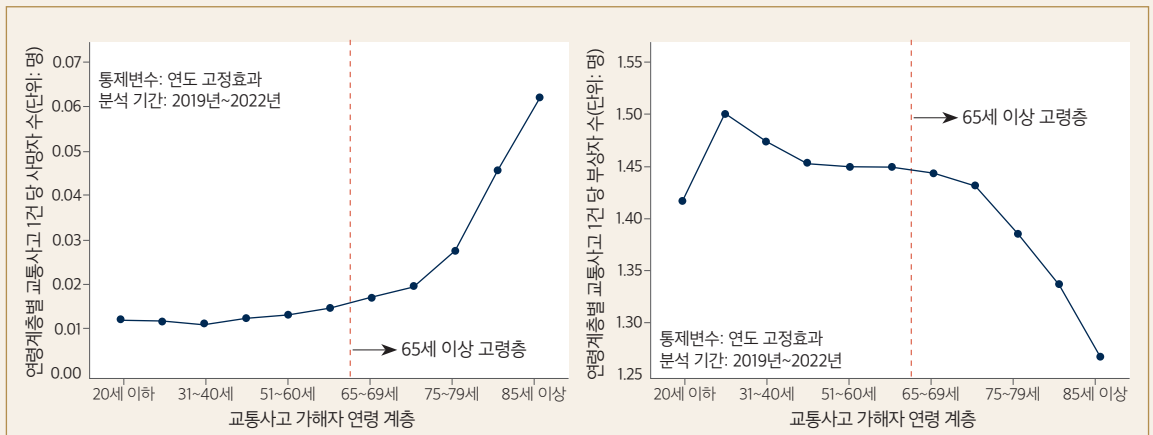
시스템(TAAS)을 통해 교통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는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다. 앞서 <그림 1>의 연령계층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65세 이상의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키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령계층별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를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 이 연령계층의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의 절대수가 다른 연령

계층의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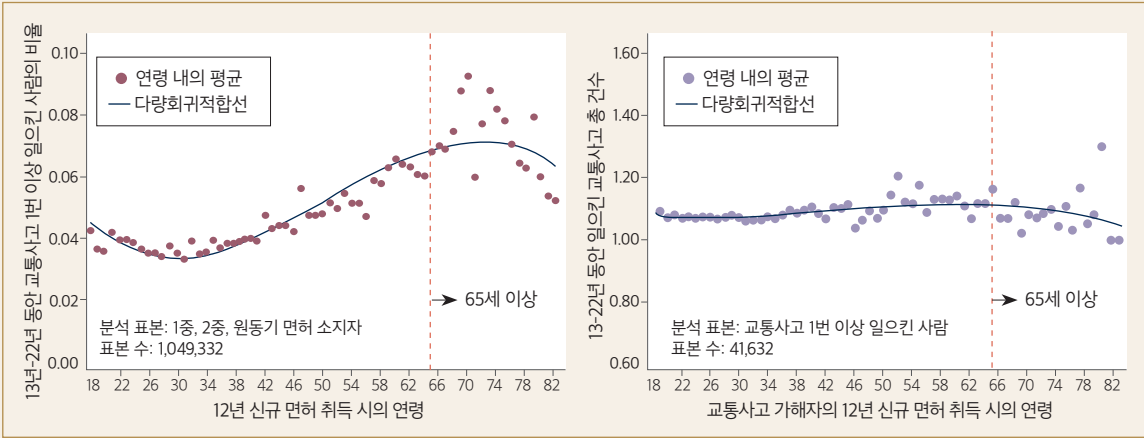
연령계층별 교통사고 건수가 아닌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령계층별로 면허소지자 수를 알아야 하는데 다행히 경찰청에서 TAAS 시스템을 통해 연도별 면허 소지자 수를 연령별로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연령계층별로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그림 1>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20세 이하이고, 20세에서 50세 연령계층에서는 사고 비중이 약 0.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더 높은 연령계층으로 갈수록 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50~60세와 61~64세의 사고 비중은 각각 0.7%와 0.8%로 나타났는데 더 고령층으로 가도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즉, 고령층일수록 사고율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만을 토대로 고령 운전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사고의 경중이 비고령 운전자가 발생시키는 사고의 경중과 다를 수 있기 때문

〈그림 3〉 연령계층별 가해자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수(좌축)와 부상자 수(우축)



〈그림 4〉 2012년 신규 면허 취득자의 10년 동안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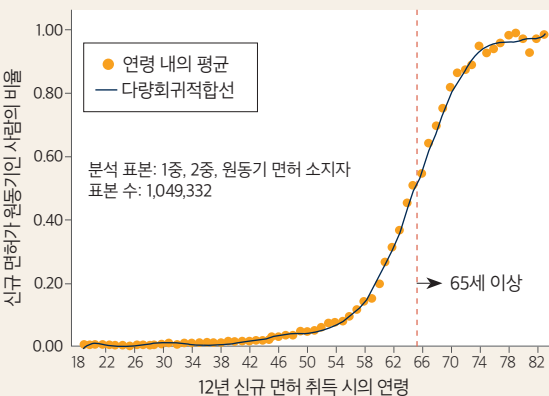
이다. 이에 고령자와 비고령자가 일으킨 사고의 경중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의 좌측 그림은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수를 연령계층별로 제시한 것이고 우측은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1건당 부상자 수를 연령계층별로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사망자 수의 경우에는 고령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일수록 더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64세 이하 집단이 일으킨 교통사고 1건당 평균 사망자 수는 약 0.015명인데 그 이후 연령계층으로 갈수록 평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85세 이상에서는 평균 사망자 수가 0.06명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상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령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고의 경중과 관련해서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고령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일수록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은 고령자의 민첩성이나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사망자를 발생시킬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한 것에 기인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 고령자가 주로 운전을 하고 이런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고령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1건당 부상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도출된 이유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고령자일수록 운전을 조심하여 경미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혹은 고령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큰 사고가 나서 부상자보다는 사망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평균 부상자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은 거시적인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는 어떤 가설이 타당한지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힘들다. 고령자일수록 교통

〈그림 5〉 신규 발급 면허가 원동기인 사람의 비율(연령별)



사고를 더 일으킬 확률이 높고 더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타당성 높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통계분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 경력이나 운전 경험도 비슷하고 운전한 장소나 날씨 상태도 비슷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령자 집단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면 고령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더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통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앞선 분석의 결과를 보면 고령 운전자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미시(Micro) 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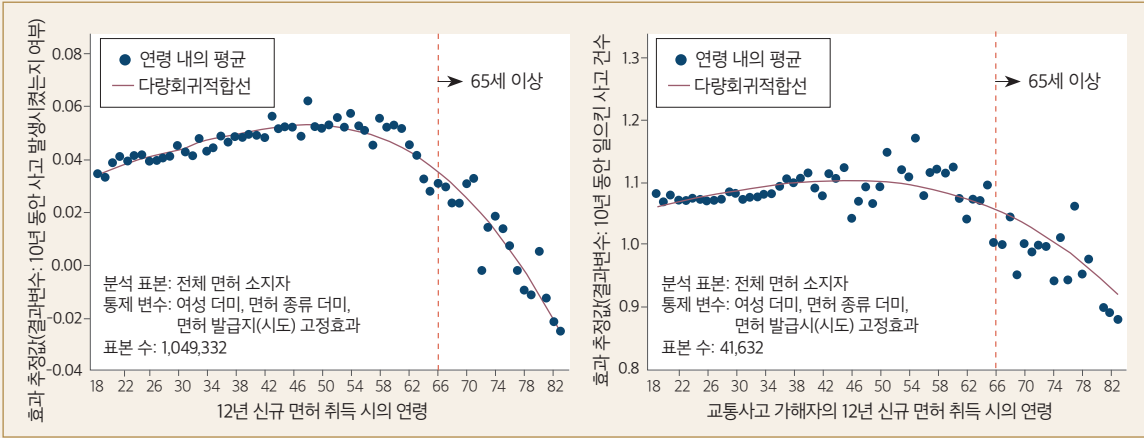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통계적 관계를 좀 더

타당하게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출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의 결과는 2012년에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일으켰다면 몇 번 일으켰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좌측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들은 10년 동안 1번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중을 연령별로 제시한 것이다. 가령 첫 번째 동그라미는 2012년에 18세인 신규 면허 발급자 중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1번 이상 일으킨 사람의 비중은 4%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45세 정도까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중이 4% 수준을 맴돌다가 그 이후 연령대부터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신규면허 발급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6%로 나타났다. 고령층에서 추정된 비중값에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연령대



<그림 6> 연령이 가해자 교통사고 발생(좌측) 및 발생건수(우측)에 미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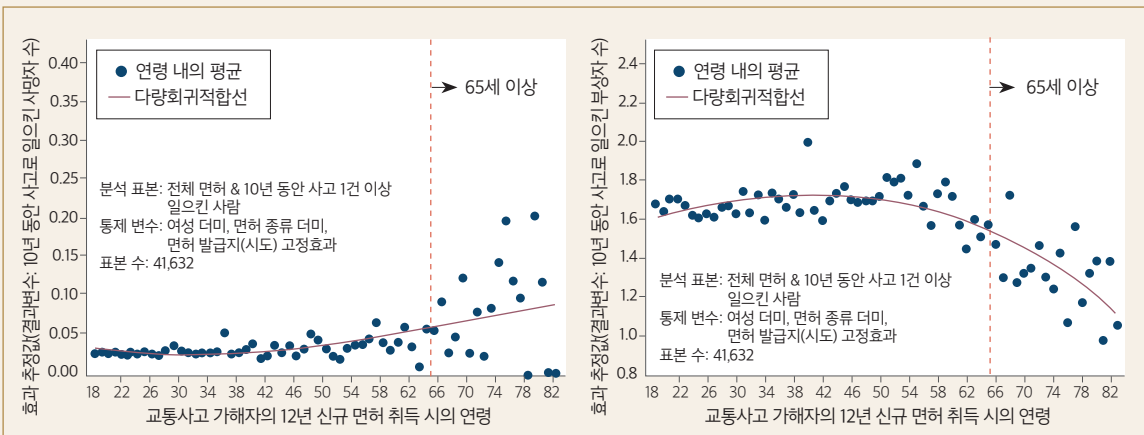


의 신규면허 발급자(표본 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림 4>의 우측 그림은 교통사고를 1번 이상 일으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몇 회 일으켰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2012년에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약 한 번 정도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둘째, 고령자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으키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토대로는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전혀 통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두 변수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5>를 보면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두 변수 간에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은 대다수의 고령자는 원동기 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4>의 좌측 그림에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림 7> 연령이 가해자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수(좌측)와 부상자 수(우측)에 미친 효과



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고령자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 확률이 높은 원동기 면허 발급 비율이 고령층에서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면의 제한 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 또한 고령층으로 갈수록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타당한 결론 내리기 힘들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좀 더 타당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그림 6>에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본 연구자가 자료의 가용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통제한 요인은 면허 발급종(1종, 2종, 원동기), 성별, 면허 발급지역(시도 단위)이다. 이들 요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같은 면허 발급종, 같은 성, 그리고 발급지역이 동일한 고령층과 비고령층끼리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서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층으로 갈수록 가해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좌측). <그림 6>의 우측 그림은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고령층일수록 오히려 발생시키는 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발생시킨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가해자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7>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면허 발급종(1종, 2종, 원동기), 성별, 그리고 면허 발급지역(시도 단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그림 7>의 좌측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는 10년 동안 사고로 발생시킨 평균 사망자 수에 미친 효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고령층이 발생시킨 사망자 수가 비고령층이 발생시킨 사망자 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림 3> 좌측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의 우측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10년 동안 사고로



발생시킨 평균 부상자 수에 미친 효과이다. 결과를 보면 오히려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상자 수가 적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거시 자료를 활용해 연령계층별로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에서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미시 자료를 활용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률 변화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고령층일수록 사고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고령층 가해자에 비해 고령층 가해자가 발생시키는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차이가 매우 큰 수준으로는 추정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가 발생시킨 부상자 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령층 가해자가 더 적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 호에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교통사고율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본 호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만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교통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요인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좀 더 많은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2012년 신규 면허 발급자 표본은 우리나라 전체 면허 소지자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 표본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전체 면허 소지자 마이크로데이터와 좀 더 과학적으로 엄밀한 연구설계를 토대로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2023년 한국리서치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일수록 운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운전 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

답자의 52.9%가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반납해야 하는 이유로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볼 때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더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본 호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면 고령층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더 본격화되면 지금보다도 정보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에 훨씬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올바르게 타당한 정보를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클지는 지난 역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가 올바르게 타당한 정보에 기반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data에 기반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이를 전파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나는 이 출근길이 참 좋다”

인터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김병조 어르신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
사진 이현수 포토그래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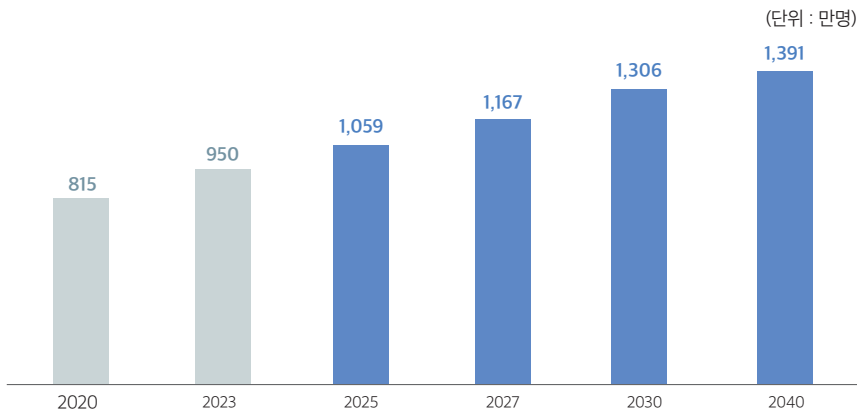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교육시설학습 보조 지원이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업무 지원 등이 있다. 65세 이상(일부유형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서 어르신들의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종합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2023년 31% 대비 2027년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023년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사회서비스형 일

자리로 신노년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 기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대표사례로 뽑을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은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전국 4개 공무원노조에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서직 직무변화 현황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토론회’를 열어 업무 증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림〉 우리나라 예상노인(65세 이상) 인구 수



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식정보와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적인 정보서비스 시설이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지식과 문화에 대해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인 것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 '시니어 북 딜리버

리' 사업은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여 생애주기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 통의 문자가 내 인생의 제3막을 열어주었다

김병조 씨는 '시니어 북 딜리버리' 사업에 참여하며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를 서가에 정리하는 등 사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학부 시절 교육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여 20여 년간 초등학생을 가르쳤다. 더불어 독서 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독서 운동에 관심도 있었다.

은퇴 후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커리어와 관심사에 맞는 교육 관련 일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 자리가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 후에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노년기 사회화 교육'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자리에 스스로를 맞추며 도전하면서 시니어 전문회사인 '에버영코리아'에서 5년간 네이버 콘



텐츠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했다.

이후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교육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시니어 북 딜리버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는 20여 년간 교육학에 몸담고, 일자리에 스스로를 맞춰 모니터링과 강사 업무를 진행했던 그에게 기존의 관심사였던 독서 활동으로 머물게 되는 인생의 제3막을 열어주었다.

그래 저곳이다. 이곳이 이제 내가 1년 가까이 근무하게 될 나의 일터이다

김병조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다. 출근을 할 때면 싱그러운 아침 해가 새롭고, 차갑게 코끝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도 새롭다. 그는 “평상시 자주 이용하던 도서관의 한 일원이 되어 '일터'로 출근하게 되니 가볍게 흥분되고 작은 떨림조차 기분 좋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할 일이 있는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도 다른지, 무기력하게 시작하던 어제와는 같은 시간 다른 기분, 일이란 이렇게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등 전반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그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분류법인 '10진 분류법'에 따른 분야별 위치도 완벽히 파악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의 위치를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책을 찾아드린다. 그럴 때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게다가 '10진 분류법'을 동료나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며 더욱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할 때면 “출근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즐거움인데 업무 또한 적성에 맞으니 하루하루 행복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요즘 말하는 '덕업일치'(좋아하는 일과 직업이 같은 것)처럼 말이다.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김병조 씨에게 출근은 이제 자연스러운 루틴이 됐다. “다녀오세요”라는 아내의 출근 인사를 뒤로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마치 신혼시절처럼 말이다.

그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언제나 돌봄의 대상이라고만 여겨지던 노인이 사회에서 무언가 필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과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인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순발력', '판단력',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지남력'이라는 여섯 가지 영역이 길러지는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이 여섯 가지 영역들이 길러지면서 노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가 예방됨을 느꼈다. 도서 대여와 정리 업무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한다면, 노년의 삶의 질 제고에 탁월한 일자리인 것이다.

사회에서의 역할, 건강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정보와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있다. 도서 대여와 정리 업무 등 도서관 운영지원은 노인일자리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약간의 전문성만 갖춘다면 업무 영역을 보다 넓힐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도서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근무처인 종합자료실로 향하면 코끝으로 책 냄새가 전해진다. “안녕하세요” 밝고 활기찬 사서의 인사가 가슴을 울린다. 그는 이 출근길이 참 좋다.

노인인구 천만시대, 일자리의 다양성 중요

노인인구 천만시대, 이제 노인의 삶은 예전과는 다르다. 신노년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으로 노인인구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노인집단 내 특성 역시 다양해졌다. 노동으로 오랜 시간 가족을 부양해온 신노년 세대는 기존 노년층보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력 수준은 높지만, 노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학력 수준이 높고 디지털에 친숙한 편으로, 이들을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는 86%를 상회한다.

노인집단 내 특성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일자리 영역을 새롭게 찾고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023년 9.6%에서 2027년까지 15% 이상으로 늘릴 예정인 것이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예정으로, <늘봄학교 돌봄 지원 - 초등학교의 등하교 전 아침, 저녁, 틈새 시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돌봄과 등·하교 안전관리를 지원>이나 <시니어 시설 안전 점검원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년기 자아실현, 모두가 행복한 노년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발굴과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노인일 자리를 통해 평소의 관심사를 일자리로 발전시킨 김병조 씨와의 인터뷰에서처럼 진정한 덕업일치의 시기가 눈앞에 있다.

참고문헌

- 김수린 외(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보건복지부(2023),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 계획(2023~2027)」



고령 사회의 살과 일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발행인

김미곤

편집위원장

변재관

편집위원

서형수, 손호성, 손균근,
박경하, 방효정, 김가원, 김지민, 박도훈

등록번호

ISSN 2765-2777

발행일

2023년 12월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와이즈타워) 19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전화

02-6731-6127

팩스

02-6731-6100

홈페이지

www.kordi.or.kr

웹진

kordi-webzine.co.kr

디자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
(02-6731-6127)

- <고령사회의 삶과 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안전한 반려견 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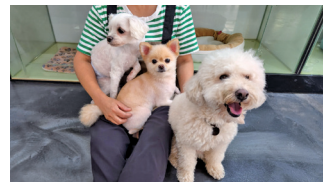
공감&펫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공감&펫'은 가족의 마음으로 반려견을 돌보고, 반려견 동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머무르며 차 한잔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노인일자리 애견카페이다. 2016년 개소 이래 반려견 호텔, 주간보호, 셀프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성장 중인 공감&펫은 '애견카페'라는 특수성을 가졌지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서와 향긋한 커피 맛에 매료된 일반 손님들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다. 공감&펫은 7명의 바리스타 참여자, 13명의 반려 관리 참여자가 근무하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견인 '소망'이와 '푸키'가 늘 반갑게 친구들을 맞아주고 있다.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합리적인 가격, 안전한 케어"라는 사명감으로 내 가족처럼 정성스런 손길로 맞춤 케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동 수준의 만족감으로 언제나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려견위탁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처럼 계획한 여행에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없을 때, 반려견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공감&펫에 맡기기를 결정한다면 반려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잠시 떠난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의 돌봄을 받고 있을 테니까. 열정 가득한 20명의 참여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분당에서 가장 특별한 애견카페, 더욱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를 응원해 본다.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공감&펫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87, 미추홀구청 본관3층사 1층
- 문의: 032-888-3999

